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金炳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41
----------	-------

발의연월일 : 2022. 6. 9.

발 의 자 : 金炳旭 · 강대식 · 구자근
김석기 · 김태호 · 김형동
류성걸 · 백종현 · 양향자
유의동 · 정우택 · 태영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운영하거나 교습비 등을 신고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하는 등의 경우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법률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신규로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 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4조제13항 신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학원설립·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

제14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⑬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9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원신고 및 폐소신고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과 제14

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학원설립·운영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u>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 ⑫ (생략) <u><신설></u>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u>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9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u>